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

2024년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

2023. 12.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I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I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I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I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목 차

Ⅰ. 총 설 ····· 1

1. 개요 ····· 1
2. 성과 및 반성 ····· 3

Ⅱ. 여건 및 추진방향 ····· 11

1. 지역 여건 및 전망 ····· 11
2. 추진방향 및 목표 ····· 23

Ⅲ. 재난 · 안전관리 체계 ····· 29

1. 국가 안전관리 체계 ····· 29
2. 부산광역시 안전관리 체계 ····· 33
3.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 50
4. 재난관리역량 강화방안 ····· 69

Ⅳ. 재난 · 안전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 74

1. **총괄** ····· 74
2. **재난·안전사고 주요 유형별 관리대책** ····· 89

[1] 자연재난 분야 ····· 89

1) **풍수해**(★주요유형) ····· 89
2) **폭염**(★주요유형) ····· 114
3) **산사태**(★주요유형) ····· 125

[2]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 131

1) **자살**(★주요유형) ····· 131
2) **화재·폭발**(★주요유형) ····· 142
   2-1) 대형화재 ····· 142
   2-2) 문화재 시설화재 ····· 153
   2-3) 전통시장 화재 ····· 163
   2-4) 초고층 건축물 등 화재 ····· 171
3) **범죄**(★주요유형) ····· 177
   3-1) 성폭력, 가정폭력 ····· 177
   3-2) 학교폭력 ····· 184
4) **도로교통 재난사고**(★주요유형) ····· 188
   4-1) 도로교통 사고 ····· 188
   4-2)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 194
   4-3) 육상화물운송 사고 ····· 203

목 차

5) **산불**(★주요유형) ····· 208
6) **감염병**(★주요유형) ····· 219
7) **산업재난 사고**(★주요유형) ····· 231
7-1) 사업장 산재 ····· 231
7-2) 건설현장 사고 ····· 246
7-3) 산업단지 사고 ····· 253
7-4) 연구실 사고 ····· 258
7-5) 중대산업재해 ····· 267
3 공통 분야 ····· 276
1)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주요유형) ····· 276
1-1) 안전문화 교육·홍보 ····· 276
1-2) 중대시민재해 ····· 296
1-3) 재난대응훈련 ····· 301
1-4) 재난안전산업 ····· 305
2) **안전취약계층 사고**(★주요유형) ····· 310
2-1) 사회복지시설 사고 ····· 310
2-2) 요양병원 사고 ····· 315
2-3) 학교시설 사고 ····· 319
2-4)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 323
2-5) 유원시설 사고 ····· 327
3. **재난·안전사고 일반 유형별 관리대책** ····· 333
1 자연재난 분야 ····· 333
1) 가뭄 ····· 333
2) 지진 ····· 337
3) 황사 ····· 353
4) 조류 ····· 360
4-1) 녹조 ····· 360
4-2) 적조 ····· 366
5) 대설·한파 ····· 373
6) 기타(낙뢰) ····· 384
2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 388
1) 시설물 재난사고 ····· 388
1-1) 건축물 붕괴 ····· 388
1-2) 지반침하 ····· 396
1-3) 저수지 붕괴 ····· 401

목 차

1-4) 댐 붕괴 ····· 405
1-5) 공동구 붕괴 ····· 415
1-6) 연안시설물 사고 ····· 423
2) 철도교통 재난사고 ····· 428
2-1) 도시철도 사고 ····· 428
2-2) 고속철도 및 경전철 사고 ····· 438
3) 선박 재난사고 ····· 443
3-1) 해양선박 사고 ····· 443
3-2) 연근해어선 사고 ····· 451
3-3) 내수면유선 사고 ····· 460
4) 방사능 재난사고 ····· 467
5) 유해화학물질 사고 ····· 485
6) 미세먼지 ····· 493
7) 수질오염 ····· 501
8) 해양오염 ····· 509
9) 가축전염병 ····· 522
10) 생활레저 사고(승강기 사고) ····· 533
11) 생활레저 사고(전기·가스 사고) ····· 540
11-1) 전기 사고 ····· 540
11-2) 가스 사고 ····· 543
12) 생활레저 사고(등산·레저 사고) ····· 550
13) 생활레저 사고(물놀이 사고) ····· 555
13-1) 계곡 물놀이 사고 ····· 555
13-2)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 559
13-3) 수상레저 사고 ····· 565
14) 생활레저 사고(생활제품 사고) ····· 569
15) 생활레저 사고(다중밀집 행사관리) ····· 572
15-1) 다중밀집 인파사고 ····· 572
15-2) 공연장 사고 ····· 579
15-3) 지역축제 사고 ····· 586
15-4) 체육시설 사고 ····· 592
16) 산업재난 사고(어업·농업재해) ····· 596
16-1) 어업재해 ····· 596
16-2) 농업재해 ····· 607
17) 식품 사고 ····· 617

목 차

18) 의료제품 사고 ····· 634
19) 테러 사고 ····· 642
3 공통 분야 ····· 648
1)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 648
1-1) 119 구조·구급 ····· 648
1-2) 응급의료 ····· 653
2) 재해구호 및 복구 ····· 658
2-1) 재해구호기금 ····· 658
2-2) 재난관리기금 ····· 659
2-3)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 660
3) 재난안전관리체계 ····· 663
3-1)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663
3-2) 안전점검 ····· 668
4) 국가핵심기반 사고 ····· 671
4-1) 전력 사고 ····· 671
4-2) 원유수급 사고 ····· 681
4-3) 가스수급 사고 ····· 687
4-4) 항만 사고 ····· 694
4-5) 의료서비스 사고 ····· 699
4-6) 식용수 사고 ····· 705
4-7) 폐기물처리시설 사고 ····· 714
4-8) 정부전산망 사고 ····· 726
4-9) 시청사 사고 ····· 739
5) 교부세 및 기타(소방안전교부세) ····· 749

Ⅴ. 행정사항 ····· 753

부록

1.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작성부서 현황 ····· 756
2.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비상연락망 ····· 763
3. 중요시설 현황 ····· 765
4.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현황 ····· 767
5.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 ····· 768

Ⅰ 총 설

1. 개 요

1)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시·도 안전관리계획 등의 작성)

2) 수립목적

○ 시·도 안전관리계획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자연 및 사회재난, 각종 안전사고 관리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운용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수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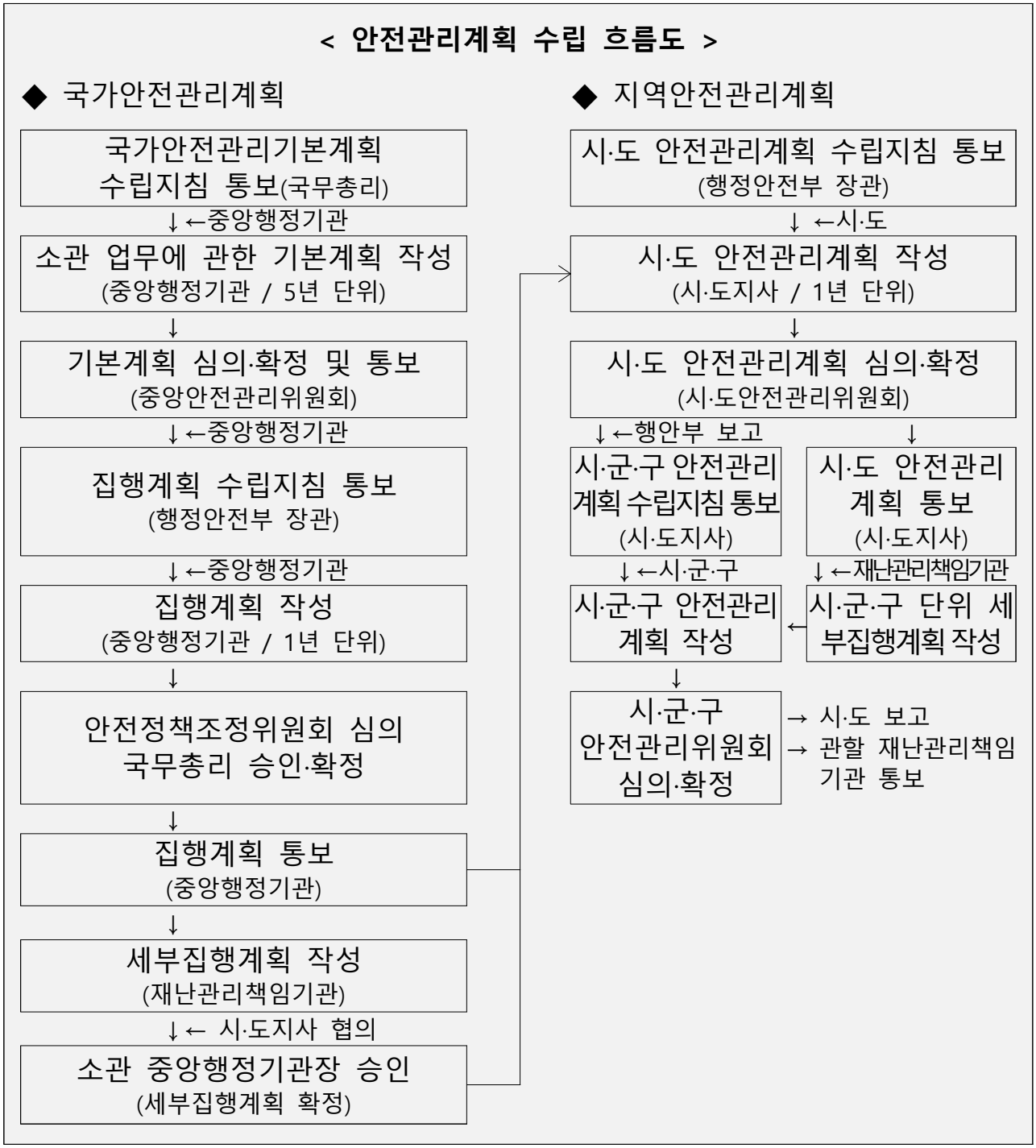
○ 국무총리는 5년 단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업무에 관한 계획과 관련된 집행계획을 작성,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와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확정, 시·도 등에 통보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협의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수립지침과 세부집행계획을 종합하여 시·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4) 수립분야

○ (자연재난) 풍수해, 대설·한파, 폭염 등 9개 유형(28개 세부추진대책)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화재·폭발, 산불, 도로교통 재난, 감염병 등 26개 유형(118개 세부추진대책)

○ (공통)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등 7개 유형(45개 세부추진대책)

2. 성과 및 반성

1) 추진성과

< 2023년도 부산시 재난안전분야 주요 성과 >

◈ (**공모사업**)『**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행안부)』 **공모사업 선정**('23.11월) ▶ 국비 120억원 확보예정
◈ (**공모사업**)『**인파사고 위험분석, 평가 기술개발**(행안부)』 **공모사업 선정**('23.4월) ▶ 국비 14억원 확보
◈ (**국제인증**)『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23.12월) ▶ 안전보건 분야 국제인증 취득
◈ (**대외수상**)『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23.5월) ▶ 특별교부세 80백만원 확보
◈ (**대외수상**)『겨울철 대설·한파 대책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23.4월) ▶ 특별교부세 50백만원 확보
◈ (**대외수상**)『2023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대통령상)' 지자체 선정('23.12월)

1 공통 분야

○ **(안전문화) 시민이 안전한 생활안전도시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 기반 조성**

- '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안전체험관) 건립**'24~'28 공모사업 선정**
  · (위치/규모) 동해선 재송역 앞(재송동 873-3 등), 대지 5,300㎡· 건축 2,700㎡(지하1, 지상3)
  · (사 업 비) 300억원(국 120, 시 90, 구 90) / (주요시설) 6개 안전분야 체험교육 등
- 시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2.6 → 7.9억원, 5종→ 8종)**
  · 모든 시민 대상,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망 등 8개 항목, 최대 1.5천만원 한도
- 재난안전 분야 기술협력 거점 마련 등 선도적 재난안전산업 육성
  ·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준공**('23.12월),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 **(안전점검) 시설별·시기별 안전점검을 통한 시민안전 제고**

- 노후·고위험시설 등 취약시설 중심 집중안전점검 추진('23.4.17.~6.16.)
  · 공무원, 민간전문가, 시민 등(6,898명) 참여, 노후 고위험시설물 등(1,524개소) 점검
- 1·2·3종 시설물(8,171개소) 및 초고층건축물 등(77동) 정기·수시 안전점검



[안전문화]
부산시 재난안전체험시설 조감도(재송동 일원, '28년 예정)



[안전점검]
집중호우 재해취약지 현장점검('23.7.18.)

○ **(안전취약계층 사고)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수립·시행**

- 부산지형 특성에 적합한 방호울타리 설치등급 기준 마련
  · 산복도로, 고지대·급경사 많은 부산의 특수 지역 반영
  · 전문가 자문을 통한 SB1~SB7 설치등급 기준 설정
- 위험도 분류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및 우선집행 기준 마련
  · 통학로 위험요인 종합적 고려하여 위험도 높은 곳 우선설치
- 정책공유 및 시민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위치기반 정책지도 제공
  · 어린이보호구역 정보서비스, 구역별 교통안전시설 통계자료 등

2 자연재난 분야

○ **(풍수해)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대응체계 전면 개선 추진**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변 산책로 통제기준 마련(11월)
  · 예비특보 시부터 선제적 통제, 구·군 통제부서간 통제시기 일원화
  · 진·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8개 하천 163개소 대상)
- 지하차도 통제기준 확립 및 상황관리 강화
  · 통제기준 확립(호우경보 또는 노면수위 15㎝이상 시), 구군별 여건 감안 선제적 통제조치
  · 지하차도 비상대피로 확보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 ▷ 지하차도(강제배수) 34개소
  · 지하차도별 담당자 4인(구·군, 경찰, 통장 등) 지정·관리
-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자연재해위험지구 등 31개소, 581억원)
- 재해취약지 점검을 통한 상시 안전관리
  · 여름철 사전대비 기간 중 재해우려지역 전수점검 실시(324개소)
-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시범운영('23.5월~24. 4월)
- 풍수해보험 지원 및 가입 적극 홍보(52,631건→56,764건)(전년대비 8% 증가)



[안전취약계층 사고]
어린이통학로 종합 안전대책 합동 브리핑('23.5.22.)



[풍수해]
도시침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3.4.13.)

○ **(폭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폭염 저감사업 추진**

- 폭염기간(7.1.~8.31.) 부산 내 모든 경로당 무더위쉼터 개방 실시(2,388개소)
-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쿨링포그 등) 설치·확대 운영(2,923개소)
- 방문건강관리 대상 등 안전 확인 및 폭염 대처(16개 구·군 117,678명)
- 건설공사장 현장 관리실 점검(7.26.~8.11.), 드론활용 폭염 예찰(8.16.~17.)
- 민·관·군 합동 주요간선도로 살수활동 전개로 도심지역 온도 저감
- 저소득 취약노인 대상 냉방용품 지원(2,779명, 재해구호기금 70,000천원)

3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 **(자살) 자살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사업 추진(참여의료기관 192개소)
  · 생명사랑 협력기관 확대(약국, 숙박업소, 번개탄 판매업소 등)
- 시민참여형 자살예방 '괜찮니 캠페인' 확대 추진으로 시민 관심도 제고
-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실시(55,215명)
- 자살예방 24시간 전화 상담(2,534건), 자살고위험군 발굴(1,823명)

○ **(화재·폭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점검 강화**

* 대형화재 : 사망 5명 이상, 사회적 이목 집중 (화재조사법 시행령 개정, '23.6.9.)

-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제도개선) 관계인 자율 안전점검 유도 및 비상구 구조안전성 검증
  · (비상구 안전) 발코니 및 부속실 자재·구조에 따른 안전등급 분류
    ※ 분류현황 : 총 2,825개소 중 A등급 481, B등급 606, C등급 1,738
- 전통시장 화재 예방 인프라 확대 등 안전대책 추진
  · 화재알림시설 설치(3개시장 569개소), 노후전선 정비(2개시장 130개소)



[폭염]
해운대 해수욕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23.6월)



[화재·폭발]
부산진구 주차타워 화재 관련 브리핑('23.1.12.)

○ **(감염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 이후 온전한 일상회복 견인**

- 법정감염병 집중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 잠복결핵 감염관리(950명), 외국인·노숙자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15,877명)
  · 에이즈 예방교육(98회, 17,483명), HIV감염인(10,827명) 검진 및 관리
  · 한센병환자 진료 및 관리(586명),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51명)
- 신종 및 생물테러 등 감염병 대응훈련 및 교육 강화
  · 생물테러 대응훈련 9회, 감염병 인력 교육 236명 수료
- 국가예방접종비 지원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수준 향상
  · 어린이(391천건), 어르신(453천건), 임신부(5천건), 사회적보호대상(19천건) 등
-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 및 축적된 방역·의료 대응역량으로 안정적 유행 관리
  · 전담 신속대응팀 및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한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지원
  · 감염병 의료협의체 정기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 대응 네트워크 활성화

○ **(도로교통 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추진**

-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8개소, 2,000백만원)
  ·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2개소, 1,050백만원)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3개소, 795백만원)
  · 교통정체구간 체계 개선사업(15개소, 3,000백만원)
  · 교통사고 방지시설 설치사업(311개소, 1,000백만원)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12,463명)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및 교육 실시(2개소, 53,598명)
- 2022년 교통문화실태 조사(국토교통부, '23.1.26.) 17개 시·도 중 4위 달성

※ ('19년) 16위 → ('20년) 6위 → ('21년) 7위 → ('22년) 4위



[감염병]
2023년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교육('23.10.19.)



[도로교통 사고]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 브리핑('23.3.29.)

○ **(범죄-성·가정폭력)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 여성가족부 '스토킹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
  · 273백만원(국 175, 시 97), 긴급주거 및 임대주택 지원 등
- 여성폭력 추방주간 캠페인 추진 및 범죄예방 홍보 실시
  · 옥외전광판(서면교차로 등), 지하철승강장 모니터(23개역 108대) 활용
- 여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실시(5개 사업, 233백만원)
-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E-Gen센터) 운영
  · 365일 24시간 여성폭력 피해상담 및 통합지원

○ **(다중밀집 행사) 광역시·도 최초 '전담 TF팀 신설'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불꽃쇼(3월), 부산불꽃축제(11월) 무사고 추진
  · 부산시-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 행사·축제 분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2회)
  · 시설 및 소방 분야 등 행사안전자문단(민간전문가 24명) 구성·운영(6회)
- 행사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계획 수립·시행
  ·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 행사 전수조사(1~2월) 및 관리(약600건)
  ·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3월) ▹ 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확립
  · 안전관리 강화계획 수립(5월) ▹ 민간단체 등 안전관리계획 이행 주체·절차 정립
- 자치구·군 안전관리 제도적 근거 마련
  · 옥외행사 안전관리 관련 구·군 조례 제·개정 ▹ 11개 구·군(5개 구 추진중)
  · 주최없는 행사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 美 메모리얼 데이(5.29,), 독립기념일(7.4,) BTS 지민 생일(10.13.), 핼러윈 데이(10.31.)
- 첨단기술 기반 인파 사고·재난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기술개발 공모사업 선정(국비 14억원) 및 추진
    * ('23년) R&D 연구개발, ('24년) 실증^{시범적용} 및 고도화



[범죄]
민·관·경 범죄예방 합동순찰 실시('23.9.12.)



[다중밀집 행사]
제18회 부산불꽃축제 현장점검('23.11.4.)

○ **(산불) 안정적 진화장비 사전확보로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

- 임차헬기 신규확보로 대형산불 저지
  · 평균대비 발생건수 비슷, 피해면적 75%, 피해금액 83% 대폭감소
  ■ 발생건수: ('23) 16건 → ('22) 22건(△27%) → (10년 평균) 13.4건(12%)
  ■ 피해면적: ('23) 4.3ha → ('22) 29.71ha(△86%) → (10년 평균) 17.61ha(△75%)
  ■ 피해금액: ('23) 2.4억원 → ('22) 40.9억원(△94%) → (10년 평균) 13.8억원(△83%)
  ■ 진화시간: ('23) 47분 → ('22) 95분(△51%) → (10년 평균) 68분(△31%)
- 대형산불 대비·대응대책('22.3월)에 따라 진화장비 대폭 교체·보강
  · 진화장비(이동식 저수조, 열화상 드론 등) 2,049점 확충
  · 산불현장지휘소 시스템 구축, 산불예방 정보알리미 설치(26개소)

○ **(방사능 재난) 방사능 분야 시민불안 해소 노력 및 방재 대응능력 강화**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및 시민불안 해소 노력
  · 전담팀 운영(6개 반, 18개 부서), 정기(10회) 및 수시(5회) 회의 개최
  · 해수·수산물 방사능 감시·분석 체계 강화 및 투명한 공개
- 「'23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지자체 선정(방사능 분야)
- '23년 부산광역시 주민보호조치 분야별 집중훈련 실시
  · 지자체, 유관기관, 지역주민과의 연계훈련(11회, 1,650명)
- 시민·학생·공무원 및 방재요원 대상 찾아가는 방사능방재 교육 실시
  · 전문강사 15명 운영, 시민·학생 540회 11,300명, 공무원 및 방재요원 6회 500명

○ **(지반침하) 도로하부 지반탐사 지속 시행 관리를 통한 예방조치**

- 지속적인 도로하부 공동 탐사를 통한 선제적 예방조치
  · 최근 5년 평균 대비 지반침하 발생건수 감소(18건 → 13건)
- 지하시설물 DB 기반 CDI 모델이용 지반침하 위험지도 구축
  · 침하위험구간 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한 지하개발 유도



[산불]
산불진화 이동식 저수조 담수훈련('23.5.6.)



[지반침하]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사고 대책회의('23.3.1.)

2) 반　　성

○ **(풍수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내 안전 사고 대책 마련 필요**

- (인명피해) 사망 1명(금정구), 실종 1명(사상구) 발생
- (개선방안) 하천 안전사고 매뉴얼 마련을 통해 강우 시 지방하천(45개소)과 수영강에 대한 출입 차단 시간 기준 강화 및 사고 대비 자동 진출입 차단시설, 긴급대피시설, 안내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추가 확충

○ **(폭염)** 전 지구적 기온상승에 따라 폭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폭염 대응을 위한 대책비 조기 지급, 시민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폭염 저감시설 확충, 근로환경 개선 등 필요

○ **(범죄) 신종 폭력에 대한 여성폭력피해자 중심 통합 대응·예방 필요**

- 4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중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신종범죄와 복합 피해 등에 대해 보다 촘촘한 피해 지원체계 강화 필요하며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 및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 확대 필요

* '21년 기준 전체 강력범죄(35천건) 중 성폭력 사건(33천건)이 93% 차지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및 여성가족부 자료)

○ **(감염병)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비 필요**

- 사전예방 중심 조직·인력 정비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전담인력 확충(역학조사관 양성 등)
  · 의료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고위험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점검 강화 요구
  · 역량강화교육 및 집합교육, 전문가 토론회 등 정보 공유 기회 확대
  ·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지원팀 운영 및 점검 상시화
  · (수습)역학조사관 법정감염병별 지속교육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 고위험군의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강화 필요
- 위기단계별 감염병 대응역량 확충 필요
- 감염병 예방접종률 제고를 통한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
  · 접종 신뢰도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

○ **(건설현장 사고) 현장 체감형 안전점검 및 교육 강화 필요**

-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교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11건 발생
-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증가
-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안전점검 및 교육 방법 등 발굴 필요

○ **(지반침하) 시·군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저하**

- 「지하안전법」 시행 초기로 인한 지하안전 중요성 인식 미비
- (개선방안) 법정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구·군별 지하안전관리 전담조직 구성 및 주기적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필요

○ **(공동구 붕괴) 공동구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 필요**

- 해운대 공동구는 준공된 지 27년 된 시설물로 시기별 정기·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시행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조물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내부 점용시설(수도, 전기, 통신) 노후화와 최근 제정된 재난·화재 관련법에 충족하는 공동구 내부 소방 및 통신시설 보완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

○ **(해수욕장 사고)** 개장시간 및 폐장 이후 입수자 대비책 마련 필요

- '19.7.1. 해수욕장법 개정(개장기간 이외 상시 입욕가능)에 따른 개장 기간 외 익사사고 발생 증가

  * '23.7.31. 송정해수욕장 야간 음주 후 입수 및 '23.9.6. 해운대해수욕장 폐장 이후 입수로 인한 인명피해 2건

- (개선방안) 관리청(구·군) 주·야간 안전요원 확대 배치 및 예찰활동 강화 디지털 장비(지능형 CCTV, 드론 등)를 활용한 적극적 안전관리 추진 비개장기간 야간 입수제한 홍보 및 단속 강화

○ **(요양병원 사고) 집중안전점검 시 분야별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 요양병원 안전점검 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점검 및 시정 조치가 어려움
- (개선방안) 건축, 가스, 전기, 소방, 승강기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점점검에 대한 정확도 제고

Ⅱ 여건 및 추진방향

1. 지역 여건 및 전망

1) 총 괄

□ 위치 및 지형

○ (위치) 부산광역시는 한반도 남단에 위치하며, 바다에 면한 남쪽을 제외하면 동쪽으로 울산광역시, 서쪽은 경남 창원시, 북쪽은 김해·양산시와 접하고 있음

- 서부산권은 표고 50m 이하의 평야지대가 형성되어있고, 동부산권은 불광산, 달음산 등 다수의 산악지대가 분포하며, 동측으로 해안과 함께 낮은 구릉지, 평탄지가 분포하고 있음

○ (지형)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는 중부산권은 금정산, 백양산을 중심으로 서고남저의 지형이며, 산복도로가 발달한 특징을 보임

- 전체면적 대비 경사도 30% 이상 급경사지 비율이 약20%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완경사지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음

□ 기상 및 기후

○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해안과 접하고 있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여름철에는 내륙지방보다 기온이 낮고, 겨울철에는 높아 연간기온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편이며, 매년 평균기온이 오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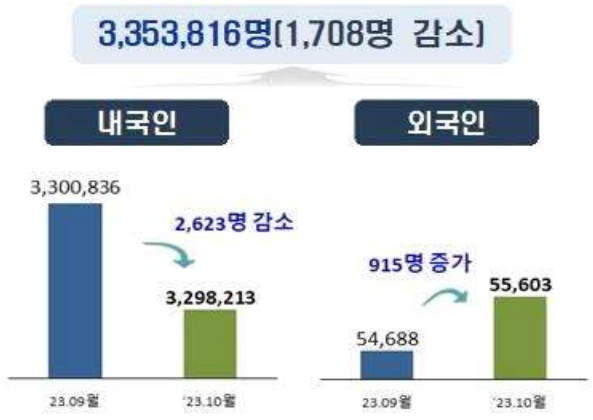
구분	기온(℃)					강수량(㎜)		최심신적설(㎝)	비고
	평균	평균최고	최고극값	평균최저	최저극값	소계	최대		
2011	14.6	18.8	33.0	11.3	-12.8	1,478.6	418.1 (7월)	**7.0** (2월)	
2012	14.5	18.6	34.5	11.3	-9.9	1,983.3	502.0 (7월)	-	
2013	15.3	19.5	35.0	11.8	-10.7	1,130.1	201.0 (5월)	0.3 (12월)	
2014	15.1	19.2	32.9	12.0	-6.0	1,693.1	642.2 (8월)	0.2 (2월)	
2015	15.4	19.5	33.5	12.2	-7.8	1,396.7	268.0 (4월)	-	
2016	15.7	19.8	**37.3**	12.5	-10.2	1,760.2	407.9 (9월)	-	
2017	15.2	19.6	36.2	11.7	-7.7	1,014.4	335.0 (9월)	-	
2018	15.1	19.2	36.4	11.8	-9.9	1,778.6	308.4 (9월)	1.3 (1월)	
2019	15.7	19.8	35.0	12.5	-4.4	1,623.2	358.9 (7월)	0.2 (1월)	
2020	15.2	19.4	33.2	11.9	-8.0	**2,281.6**	**796.8** (7월)	-	
2021	15.7	**19.9**	35.6	12.4	**-12.2**	1,807.8	481.2 (8월)		

※ (통계출처) 부산광역시 통계연보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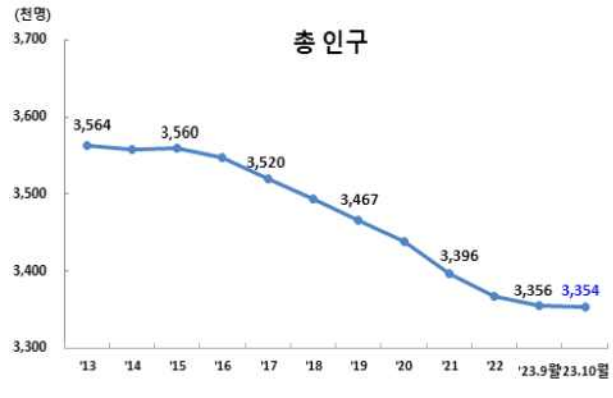
□ 인구 및 사회적 여건

○ (**총괄**) 부산의 2023년 10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3,353,816명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까지 감소율이 둔화되었으나 2016년부터 다시 감소율이 높아지는 추세임

*(인구추이) 3,564천명('13) → 3,560천명('15) → 3,520천명('17) → 3,467천명('19) → 3,396,000명('21)



전월('23.9월) 대비 인구감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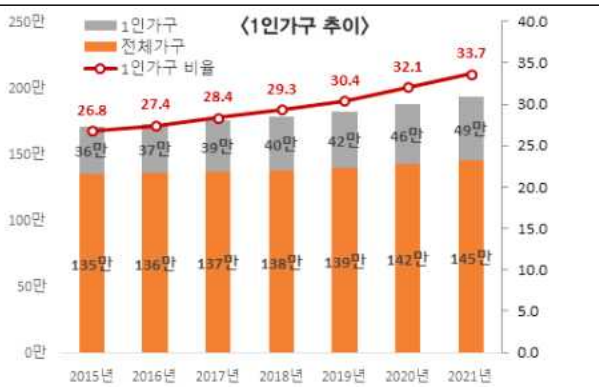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연도별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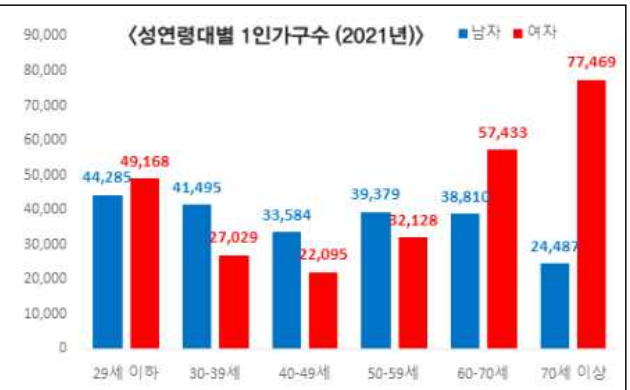
○ (**고령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42,397명이며, 고령화율은 22.1%로 초고령사회(20%이상)로 분류,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 인구구조상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이 요구됨

○ (**1인 가구**) 부산광역시 1인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도 이후 약 13만 가구(6.9%)가 증가하였음

- 성별로는 남성 222,040명, 여성 265,322명으로 여성 1인가구가 43,282명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101,956명, 60~70대가 96,243명, 29세 이하가 93,453명으로 나타남



부산광역시 연도별 1인가구 추이



부산광역시 성연령대별 1인가구 수('21년)

※ (통계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022)

2) 피해 현황

□ 재산피해 ※ 상위 5개 유형 분석

① **(풍수해)**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태풍과 강수의 강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 최근 5년간('18~'22) 총 60건 발생, **총 49,507백만원의 재산피해**

*재산피해 추이	('18) 7,297 → ('19) 1,931 → **('20) 26,621** → ('21) 1,834 → ('22) 11,824 (단위:백만원)

② **(화재·폭발)** 주택 밀집 지역이 많고 도로 여건 열악, 주차공간이 협소 등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책 추진

➲ 최근 5년간('18~'22) 총 12,169건 발생, **총 38,560백만원의 재산피해**

*재산피해 추이	**('18) 11,026** → ('19) 6,242 → ('20) 5,901 → ('21) 6,174 → ('22) 9,217 (단위:백만원)

③ **(산불)**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이 상승으로 **건조 지역이 확대**되고, 최근 **등산·캠핑인구 증가 등 레저문화 확산**으로 입산객에 의한 실화(담뱃불 등), 쓰레기 소각 등 산불발생 위험 증가

➲ 최근 5년간('18~'22) 총 79건 발생, **총 10,474.5백만원의 재산피해**

*재산피해 추이	('18) 1,999 → **('19) 4,351** → ('20) 21.4 → ('21) 5 → ('22) 4,098 (단위:백만원)

④ **(산사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와 산림 훼손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 지반 약화로 산사태 위험 증가

➲ 최근 5년간('18~'22) 53건 발생('20년), **총 834백만원의 재산피해**

⑤ **(가축전염병)** 고병원성 AI(가금류) 및 소브루셀라·결핵(우제류) 등이 주된 요인

➲ 최근 5년간('18~'22) 총 7건 발생, **총 58백만원의 재산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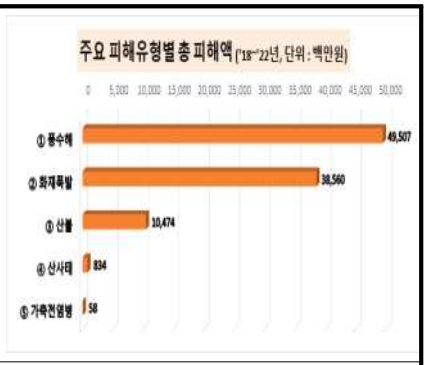
*재산피해 추이	('18) 20 → ('19) 20 → ('20) 4 → ('21) 5 → ('22) 9 (단위:백만원)



(풍수해) 2020년 10호 태풍 하이선



(산불) 2019년 해운대구 운봉산(56ha)



주요 피해유형별 총 피해액

□ 인명피해 ※ 상위 5개 유형 분석

① **(자살)** 정신과적 문제와 경제적 상황, 건강문제, 가족 불화 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사망률이 높고 건강문제 등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임

➲ 최근 5년간('18~'22) **총 4,725명의 사망(실종)자 발생**

*인명피해 추이	('18) 952 → **('19) 1,020** → ('20) 921 → ('21) 926 → ('22) 906	(단위:명)

② **(교통사고)** '안전속도 5030' 사업 안정화와 보행환경 개선 등으로 사망자 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자 노력중이며, 65세 이상 사망자 비율(38%)이 가장 높음

➲ 최근 5년간('18~'22) 58,607건의 사고로 **총 553명의 사망자 발생**

*인명피해 추이	('18) **122** → ('19) 115 → ('20) 100 → ('21) 106 → ('22) 110	(단위:명)

③ **(사업장 산재)** 대형사고 예방 대응체계 강화, 사업장 자율안전 보건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재정지원 확대('19~) 등 전반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전년대비 사망자 수 5% 감소 목표

➲ 최근 5년간('18~'22) **총 267명의 사망자 발생**

*인명피해 추이	**('18) 64** → ('19) 53 → ('20) 55 → ('21) 54 → ('22) 41	(단위:명)

④ **(화재·폭발)** 다중밀집시설 건축물 고층화 및 노후화로 대형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요인 상존

➲ 최근 5년간('18~'22) **총 85명의 사망자 발생**

*인명피해 추이	('18) 14 → ('19) **9** → ('20) 13 → ('21) 16 → **('22) 33**	(단위:명)

⑤ **(풍수해)** 돌발성·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침수 및 하천변 사고 등 발생

➲ 최근 5년간('18~'22) **총 13명의 사망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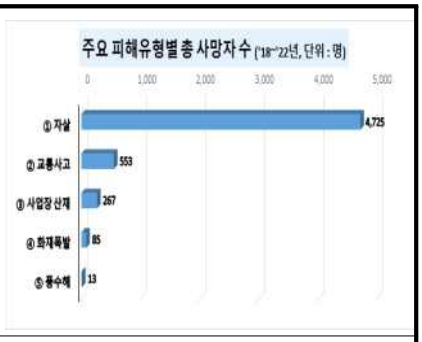
*인명피해 추이	('18) 1 → ('19) 3 → ('20) 5 → ('21) 5 → ('22) 0	(단위:명)



(풍수해) 2020년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화재) 2022년 안락동 전기차 화재



주요 피해유형별 총 사망자 수

3) 주요 재난유형 선정

○ **(주요유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주요유형 선정 프로그램 도출 결과에 따라 피해현황 및 지자체 현안 등을 고려,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 프로그램 도출(10개) 및 자체선정(2개) ▹ 사업장 산재, 안전문화

< 주요 재난·안전 유형 선정 결과 – 부산광역시 >

분야	재난유형	위험점수 (5)	피해현황 (5)	현안점수 (5)	시민체감도 (1)	투자유형 (1)	합계 (17)	분야순위	전체순위
자연재난 (3)	풍수해	5	5	5	1	1	**17**	1	1
	폭염	4	5	2	1	1	**13**	2	7
	산사태	5	4	2	0	0	**11**	3	10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7)	자살	5	5	5	0	1	**16**	1	3
	화재폭발	5	4	5	1	1	**16**	1	3
	범죄	5	5	3	1	1	**15**	3	5
	도로교통	5	5	2	1	1	**14**	4	6
	산불	5	4	3	0	1	**13**	5	7
	감염병	5	5	1	0	1	**12**	6	9
	사업장 산재	5	4	1	0	1	**11**	7	10
공통 (2)	안전취약계층	5	5	5	1	1	**17**	1	1
	안전문화	-	-	-	-	-	-	2	12

○ **(주요유형 선정 참고자료)**

- 2023년 미래 위험목록 보고서 및 주요유형 선정 프로그램(국립재난안전연구원)
-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재난연감 등에 따른 지역 피해현황
- 부산시 '24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 정책 방향
- 부산연구원 간행물 (BDI insights) 부산지역 지역안전지수 개선·관리체계 구축('22.7.)

4) 주요 재난유형 분석

○ (풍수해) 대부분 항목에서 위험도를 비롯하여 현안점수와 주민체감도가 가장 높아 자연재난 및 전체분야 중 위험순위가 가장 높게 산정됨

< 부산 지역 연도별 풍수해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건수		60	12	7	11	12	18
재산피해		49,507	7,297	1,931	26,621	1,834	11,824
인명피해	계	14	1	3	5	5	-
	사망(실종)	13	-	3	5	5	-
	부상	1	1	-	-	-	-

※ (통계출처) NDMS 공공피해 기준

- 부산에서는 최근 5년간 60건의 풍수해로 인해 총 사망자 13명, 부상자 1명, 40,857백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 특히, '23년도에는 극심한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장마철 누적강수량 중구806㎜, 최대시우량 영도구91.5㎜를 기록하는 등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한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고, 학장천실종 1명, 온천천사망 1명 발생
- 급경사면에 도시가 형성된 지형적 영향 및 바다와 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태풍과 집중호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피해도 큼

○ (폭염) 정책현안, 주민체감도 측면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위험도가 낮으나, 위험점수와 피해현황 등에 따른 위험도가 높게 산정됨

< 부산 지역 연도별 폭염 피해현황 > (단위 : 일, 명)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책기간		-	5.20.~9.30.	5.20.~9.30.	5.20.~9.30.	5.20.~9.30.	5.20.~9.30.
특보일수 (주의보/경보)		158일 (109/49)	39일 (25/14)	24일 (17/7)	27일 (16/11)	31일 (21/10)	37일 (30/7)
인명피해		459	208	100	53	45	53
온열 질환자	사 망	5	2	2	-	1	-
	열사병	68	19	13	12	11	13
	열탈진	308	154	67	29	24	34
	열경련	47	18	11	9	7	2
	열실신	23	11	5	3	2	2
	기 타	8	4	2	-	-	2

※ (통계출처)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 신고현황(질병관리청)

- 부산에서는 최근 5년간 총 158일의 폭염특보로 459명의 온열질환자 발생

▹('18년도) 최초 기상관측 이후 111년 만의 최악의 폭염으로 부산 지역 폭염특보일수 39일, 온열질환자 208명 발생(사망 2명 포함)

-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시민의 22.0%'23.9월기준에 달하는 연령별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 우려
-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 폭염·열대야 일수 증가 및 도심지역 열섬현상 등에 따른 인명피해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산사태) 주민체감도, 재난안전예산 투자 측면에서는 위험도가 낮으나, 위험점수와 피해현황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음

< 부산 지역 연도별 산사태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건수		53	-	-	53	-	-
재산피해		834	-	-	834	-	-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 (통계출처) 산사태정보시스템(산림청)

- 부산에서는 최근 5년간 53건의 산사태 발생('20년)으로 총 834백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 이상기후로 태풍,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장마기간이 늘어나는 등 산사태에 취약한 기후조건으로 변하고 있음
- 산사태 취약지역 등 관리대상의 지속 증가와 산림 훼손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산사태 피해 위험 지속 증가

○ (자살) 대부분의 항목에서 위험도가 높아 사회재난 중 위험순위가 가장 높음

< 부산 지역 연도별 자살사망 발생 현황 >

(단위 : 명)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건수		4,725	952	1,020	921	926	906
인명피해	사망(실종)	4,725	952	1,020	921	926	906

※ (통계출처) 2022 사망원인 통계자료(통계청)

- 부산에서는 최근 5년간 총 4,725명의 자살 사망자가 발생
- 2023년 자살예방백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대국민 지원금, 심리방역 등 긍정적 영향으로 '19년 이후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음
-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통상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 시기에는 국민적 단합력이 발휘되어 자살 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재난 극복 이후 향후 2~3년간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의 자살률 급증 가능성을 우려함
- 아울러, 부산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살 분야 취약지표(고령인구수, 기초수급자수, 고위험군 음주율)가 타 특·광역시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 만 명당 자살 건수가 70대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 자살 시도자 및 사망자의 절반이 음주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인구의 자살 방지 및 고위험군 음주율 관리를 위한 대책 필요

* (BDI insights) 부산지역 지역안전지수 개선·관리체계 구축('22.7.)



[타 특·광역시 평균 대비 부산지역 취약지표(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추이]-BDI insights('22.7.)

○ **(화재·폭발)** 정책현안 측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위험도가 높아 사회재난 중 위험순위가 두 번째로 높음

- 부산에서는 최근 5년간 총 12,169건의 화재로 사망자 85명, 부상자 706명, 38,560백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 다중밀집시설 등 건축물 고층화 및 노후화로 대형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요인 상존

< 부산 지역 연도별 화재 · 폭발 피해 현황 >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건수(건)		12,169	2,471	2,440	2,499	2,271	2,488
재산피해(백만원)		38,560	11,026	6,242	5,901	6,174	9,217
인명피해	계(명)	791	143	130	179	154	185
	사망(실종)	85	14	9	13	16	33
	부상	706	129	121	166	138	152

※ (통계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소방청)

- 부산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밀집 지역이 많고 도로 여건이 열악하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려운 여건
-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이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부산 지역 전체 12,169건 화재 중 부주의 6,769건(55.6%)

○ (범죄) 대부분의 항목에서 위험도가 높아 화재·폭발 분야와 함께 사회재난 중 위험순위가 두 번째로 높음

< 부산 지역 연도별 가정폭력 신고·성폭력 발생 현황 >

(단위 : 건)

구 분		평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폭력	112신고 건	13,069	15,174	13,938	11,718	11,912	12,602
성폭력	발생 건	2,153	1,952	2,004	1,900	2,139	2,771

※ (통계출처) 부산경찰청

- 부산에서는 최근 5년간 총 성폭력 10,766건, 가정폭력 65,344건 발생
- 성폭력의 경우, 최근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 발생 관련 예방교육 등을 통한 사전예방 노력 필요
- 가정폭력의 경우, 가족 구성원 간 심리적,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사례, 아동학대 등과 연관성이 높아 신고와 지원의 통합적 대응 요구

○ **(도로교통 재난사고)** 지자체 위험점수와 피해현황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 사회재난 중 위험순위가 네 번째로 높음

< 부산 지역 연도별 교통사고 피해현황 > (단위 : 건, 명)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록대수		7,159,506	1,371,172	1,395,183	1,429,040	1,464,608	1,499,503
발생건수		58,607	11,859	12,903	11,842	11,229	10,774
인명피해	계	80,608	16,438	17,768	16,327	15,348	14,727
	사망	553	122	115	100	106	110
	부상	80,055	16,316	17,653	16,227	15,242	14,617

※ (통계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부산에서는 최근 5년간 58,607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 553명, 부상자 80,055명의 인명피해 발생
-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국토교통부,'23.1.26.)에 따르면 부산은 17개 시·도중 4위로 도로교통 분야 안전의식·문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임

▹ 교통문화지수 시·도 순위 : ('19년) 16위 → ('20년) 6위 → ('21년) 7위 → **('22년) 4위**

○ **(산불)** 피해현황 점수는 다른 재난 유형에 비해 낮지만, 지역 내 산불 피해에 따른 정책현안 등을 고려하면 사회재난 중 위험순위가 다섯 번째로 높음

< 부산 지역 연도별 산불 피해현황 > (단위 : 건, ha, 백만원)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산불 발생	건당 피해면적	2.15	4.39	3.46	0.06	0.11	0.03
	건수	79	15	21	15	6	22
	면적	170.11	65.93	72.84	0.97	0.66	29.71
	재산피해	10,474.5	1,999.0	4,351.1	21.4	5	4,098

※ (통계출처) 2022년 산불통계연보(산림청)

- 부산에서는 최근 5년간 79건의 산불로 총 면적 170.11ha, 총 재산 피해 10,474.5백만원 발생
- 기후변화에 따른 평균기온 상승으로 건조 지역 확대와 더불어, 봄철 건조특보 일수 증가 등 산불 발생에 대한 예측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등산 및 캠핑인구 증가 등 레저문화 확산에 따라 입산자 실화 등 산불 발생 위험 증가

▹ 최근 10년간 산불원인 : 입산자 실화(31%), 소각산불(23%), 담뱃불실화(12%)

○ (감염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락 및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어 정책현안과 주민체감도 측면에서 위험도가 낮아졌지만, 위험점수와 피해현황, 재난안전예산 투자 측면에서 여전히 위험도가 높아 사회재난 중 위험순위가 여섯 번째로 높음

< 부산 지역 법정감염병 신고 현황 >

(단위 : 건)

구 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신고현황	**1,738,936**	**9,977**	**30,676**	**1,698,283**
코로나19	**1,716,610**	1,867	23,208	1,691,535
그 외	**22,326**	8,110	7,468	6,748

※ (통계출처) 국가통계포털(통계청)

< 코로나19 제외 법정감염병 신고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8,110	7,468	6,748	
제1급	0	0	0	
제2급	5,989 (CRE 2,224)	5,554 (CRE 2,370)	5,106 (CRE 2,501)	
제3급	2,121	1,914	1,642	

※ (통계출처) 국가통계포털(통계청)

- 부산에서 2022년 신고된 법정감염병 환자는 총 1,698,283명으로 '21년 30,676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를 제외하면 '21년 7,468명에서 '22년 6,748명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

- 코로나19를 제외한 법정감염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2급 감염병 중 CRE 감염증 신고건수는 '22년 2,50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3급 감염병 중 C형 간염 신고건수가 '22년 1,139건으로 가장 많음
- 항생제 내성균 출현이 갈수록 증가하고, 해외여행 및 국제교류 확대 등으로 신종 감염병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임
- 토착화된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예측 불가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동향감시, 전문적·지속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사업장 산재)** 정책현안과 주민체감도 측면에서 위험도가 낮지만, 부산 지역 내 사업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위험점수와 피해현황 항목에서 위험도가 높아 사회재난 중 위험 순위가 일곱 번째로 높음

< 부산 지역 연도별 사업장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

(단위: 명, ‰)

구 분	연평균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망자 수	53.4	267	64	53	55	54	41
상시근로자 수	-	-	1,131,146	1,083,058	1,089,623	1,091,122	1,123,175
사고사망만인율(‰)	-	-	0.56	0.48	0.50	0.49	0.36

※ (통계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 통계

- 부산에서는 최근 5년간 사업장 사고로 총 26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 분석 결과 업종별로는 건설업(126명), 제조업(68명), 기타업종(73명) 순, 사고형태별로는 떨어짐(105명), 끼임(40명), 부딪힘(21명) 순으로 발생
- 대형사고 예방 대응체계 강화, 사업장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재정지원 확대('19~) 등 전반적인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열악한 환경 등 안전사각지대 발생 우려

*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 ('18년) 1,285명 → ('19년) 1,245명 → ('20년) 1,303명 대·중기업과 소규모 사업장 간 업무상 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 격차 2배 이상

2. 추진방향 및 목표

목 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추진 전략

◈ (생활안전)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 (재난대응) 현장중심의 선제적·과학적 재난대응력 강화

◈ (원전안전) 시민중심의 원전안전 확보 및 산업육성

2024년 중점 추진 과제

1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① 통합적 지역안전관리 강화
	②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③ 다중밀집 시설 등 예방적 안전관리
	④ 선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
2 현장중심의 선제적·과학적 재난대응력 강화	⑤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 및 관리
	⑥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력 제고
	⑦ 선제적 재난 대응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3 시민중심의 원전안전 확보 및 산업육성	⑧ 원전정책 적극 대응 및 소통·정보공유 활성화
	⑨ 원전안전 및 방사능방재대책 추진
	⑩ 원전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1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1. 통합적 지역안전관리 강화

○ **(지역안전정책 총괄)** 행정역량 집중으로 지역 재난안전관리 책임체제 강화

- 지역 재난안전관리의 최상위 종합계획인 안전관리계획 수립(12월) 및 추진
-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검토제 운영(5~10월)
- 市 자체 위기 대응을 위한 기능연속성계획 교육·훈련 실시(11월)

○ **(지역안전지수 개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지수 개선 및 기반 구축

- 지역 안전수준 향상 컨설팅 추진(6개 분야, 행정안전부 공모)
- 지역안전지수 개선계획 수립('25~'26년), 구·군 안전증진 개선사업 추진

○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글로벌 안전도시 구현 및 브랜드 제고

- 손상자료 조사·분석 등 발표자료 작성(2월), 국제공인센터 현장 실사(3·8월)
- 공인 획득, 대외적 선포식 개최(9월), 공인 유지 및 안전도시 사업 추진

2.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지속가능한 안전사회 조성

- 방송·언론 및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 강화
- 시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시행 * 보장항목 탄력적용 검토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추진

○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안전교육 강화 등 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 유해환경, 이용시설 등 6개 분야별 추진과제

○ **(사회적약자 안전 강화)** 방범용 CCTV 확충 및 위치관리서비스 확대

- 지능형 방범용 CCTV 설치(10억원) ▷ CCTV(150대) 및 센터 장비 교체
- 스마트 위치관리서비스 서비스 확대(2억원) ▷ 안심태그 구매·배부

○ **(민생분야 위해행위 수사)** 시민생활 위해범죄 적극 수사 및 정보수집 강화

- 7대 지명 분야(사회복지, 환경, 식품, 원산지,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의약) 수사 전개
- 유관기관 협업, 온라인 모니터링 등 다양한 채널 통한 정보 수집
- 수사성과 언론보도 등 홍보활동으로 범죄예방 효과 제고
- 시기별·사회이슈 대응한 시의성 있는 기획수사 추진

3. 다중밀집 시설 등 예방적 안전관리

○ **(다중이용·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민관합동 점검으로 위험지역 조기 해소

- 안전위험시설(대형공사장, 노후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집중점검
- 과학기술장비(드론, 열화상감지기 등) 활용 점검 사각지대 해소

○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별·시기별 안전점검으로 시민안전 제고

- 1·2·3종 시설물(8,171개소) 및 초고층건축물 등(77동) 정·수시 안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3,694개소) 안전관리실태 정기(특별)점검
- 명절(설·추석)대비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실태 점검(1· 9월)
- 해빙기 취약시설, 봄 행락철 안전관리실태 점검(3~5월)
- 여름철 물놀이지역(계곡·하천) 안전관리실태 점검(5~8월)

○ **(행사·축제 안전관리)**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사고예방

- 계절별 지역축제, 해넘이·해맞이, 정월대보름 행사장 등 안전점검(연중)
- 주최·주관 유무와 상관없이 다중인파 운집 예상 행사·축제 안전관리체계 정립

4. 선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

○ **(안전산업박람회 개최)**[9.10.~12., 벡스코] 국내 최대 규모 안전분야 종합박람회

- 지역 재난안전산업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5.4억원)

○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운영)** 재난안전 분야 기술협력 거점

-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 안전산업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등

○ **(부산안전산업존 활성화)** 안전산업분야 창업지원·육성

- 입주기업 창업보육·판로지원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1.5억원)

○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24~'28] 재난안전 기술개발 종합계획[행안부] 연계

2 현장중심의 선제적 · 과학적 재난대응력 강화

5.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 및 관리

○ **(대응체계)** (구조)소방·해경, (수습)주관 실·국·구군, (총괄조정)재대본

○ **(상황판단)** 재난현장과 지휘부 간 실시간 정보공유로 신속한 상황판단

- 재난현장 영상정보시스템 활용, 재난현장 영상 재난안전상황실 표출

○ **(상황공유)** 재난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로 협업체계 구축

- 경찰·소방·해경, 의료·전기·가스 등 다양한 재난 관련 유관기관 참여

○ **(신속전파)** 재난정보 전달체계 확대 구축으로 시민피해 최소화

- KBS, 부산교통방송과 협업 강화 ▷ 교통통제, 태풍경로 등 지역정보 편성
- 긴급재난문자(CBS), 유관기관, 원-클릭 시스템 활용 등 신속 전파

○ **(매뉴얼 정비)** 市, 구·군 재난관리 매뉴얼 미비점 검토 등 지속 보완

- 시급성 및 중요도 등을 감안, 단계별 정비

○ **(실제훈련)** 시민체감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11월)

6.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력 제고

○ **(과학적 재난대응)** ICT 기반 재난정보 제공 및 대시민 정보 제공

-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제공* 및 방송국 등 CCTV 영상 공유

* 내수침수예상도(도심, 해안, 하천), 침수감시CCTV, 대피소(경로) 등 정보 제공

- 하천범람 감지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노후 예·경보시설 교체
- 재난안전통신망(PS-LTE) 운영을 통한 유관기관 상황공유 및 신속 대응

○ **(재난안전 R&D 추진)** 행안부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사업 추진

- AI 기반 주거지 옹벽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실증('22~'24년, 13.1억원)
- 첨단기술 기반 인파 사고·재난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23~'24년, 14억원국비)
- '24년 신규 재난안전 R&D 대상사업 지속 발굴

7. 선제적 재난 대응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 **(여름철 풍수해 대응)** 사전대비(3~5월) 및 집중 대책기간(5~10월) 운영
- 풍수해(호우·태풍) 종합대책 수립·추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상황 대응
- 인명피해우려지역(324개소) 현행화 및 점검, 구·군 대비사항 점검 등 사전 대비
- 물막이판 설치(3억원), 풍수해보험 가입(6억원), 수방장비(2억원) 등 지원

○ **(폭염, 대설·한파 대응)** 사전장비 확충 및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폭염 상황관리체계(상황실) 구축, 폭염 저감시설 설치 확대(4.8억원)
- 상습결빙구간(127개소) 관리, 재설장비 확보, 염수분사장치(12개소) 운영

○ **(지진 사전대비)** 지진 예방사업 추진 및 시민안전 확보
- 공공시설 내진 보강(12개소), 민간시설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12개소)
- 지진 계측장비(22개소) 운영, 대피장소(680개소) 점검, 지진안전주간(9월) 운영 등

○ **(재해위험지역 해소)** 재해예방사업 단계적 추진(41개소, 928억원)
- 재해위험개선지구(14개소 373억원),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2개소 108억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6개소 264억원), 우수저류시설(1개소 150억원)
- 소규모 재해예방사업(18개소 33억원)

○ **(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 강화)** 재해사업장, 급경사지 등 안점검검 실시
- 재해예방사업장(30개소), 재해복구사업장(49개소) 점검 ▷ 수시
- 급경사지(694개소), 저수지·댐(99개소) 안전관리 점검 ▷ 상·하반기

3 시민중심의 원전안전 확보 및 산업육성

8. 원전정책 적극 대응 및 소통·정보공유 활성화

○ **(안전성 확보 노력)** 시민안전 최우선 확보 원칙, 市 역할 적극 모색
- 엄격한 원전 안전성 평가, 신뢰성 있는 안전규제 마련, 충분한 의견수렴 요구
- 원전 안전설비 확인,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현장확인 강화로 불안 해소

○ **(지방참여권 확보)** 원전안전정책 관련 법령·제도 개선 지속 건의
- 원전소재 광역단체장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 원전 사고·고장 시 광역단체장 현장확인·조사참여권 확보 등

○ **(소통기구 운영 강화)**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원전안전 지속 모니터링
- 상시·실시간 정보공유, 원전안전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시 신속 대응

* 市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고리원자력안전협의회,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등

9. 원전안전 및 방사능방재대책 추진

○ **(원전안전 및 방사능방재)** 과학적 기반의 주민보호체계 구축 추진

- 교통통제 방법론, 대규모 주민 대피 시뮬레이터 개발 협력·지원
  * 우리 시 특성 고려 교통통제 방법론 및 기관별 협력 절차(한국교통연구원)
  * 동시·대규모 주민소개 기능 고도화, 소개 경로·시간 산출(국립재난안전연구원)
- 市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고도화, 통합 관제서버 구축
  * 현장영상 공유, 다목적 이동식 가두방송장비 통합 조정통제, 실시간 경보전파 등

○ **(대응태세 확립)** 방사능방재 훈련, 교육·홍보, 시설·물자 관리 지속

- 비상대응기구 운영, 주민보호조치 분야 전 과제 방재훈련 실시
- 찾아가는 맞춤형 방사능방재교육, 방재요원 전문교육, 홍보 강화
- 인접 지자체 협조 구호소 지정, 비축창고 등 비상대응시설 확보
- 방재복, 안전통제물품 등 확보(3,260점) 및 효율적·체계적 관리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팀 운영, 해수·수산물 방사능 감시·분석 강화

- 전담팀 회의(정기·수시), 방류상황 고려 선제적 대책 마련·시행
- 방사능 분석 용역, 전문가(기관) 협력·자문, 감시망 추가 설치 등

10. 원전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건립)** 안전한 원전해체를 위한 기술력 확보

- 연구원 건립 공사 및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추진
  * 사무동·연구동·모형실험동('24.10월), 실증분석동('26.하), 장비구축 R&D('23~'26)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산·학·연·관 연계 핵심사업 발굴 및 인재양성

- 부산·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신규사업 발굴,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21~'25, 72.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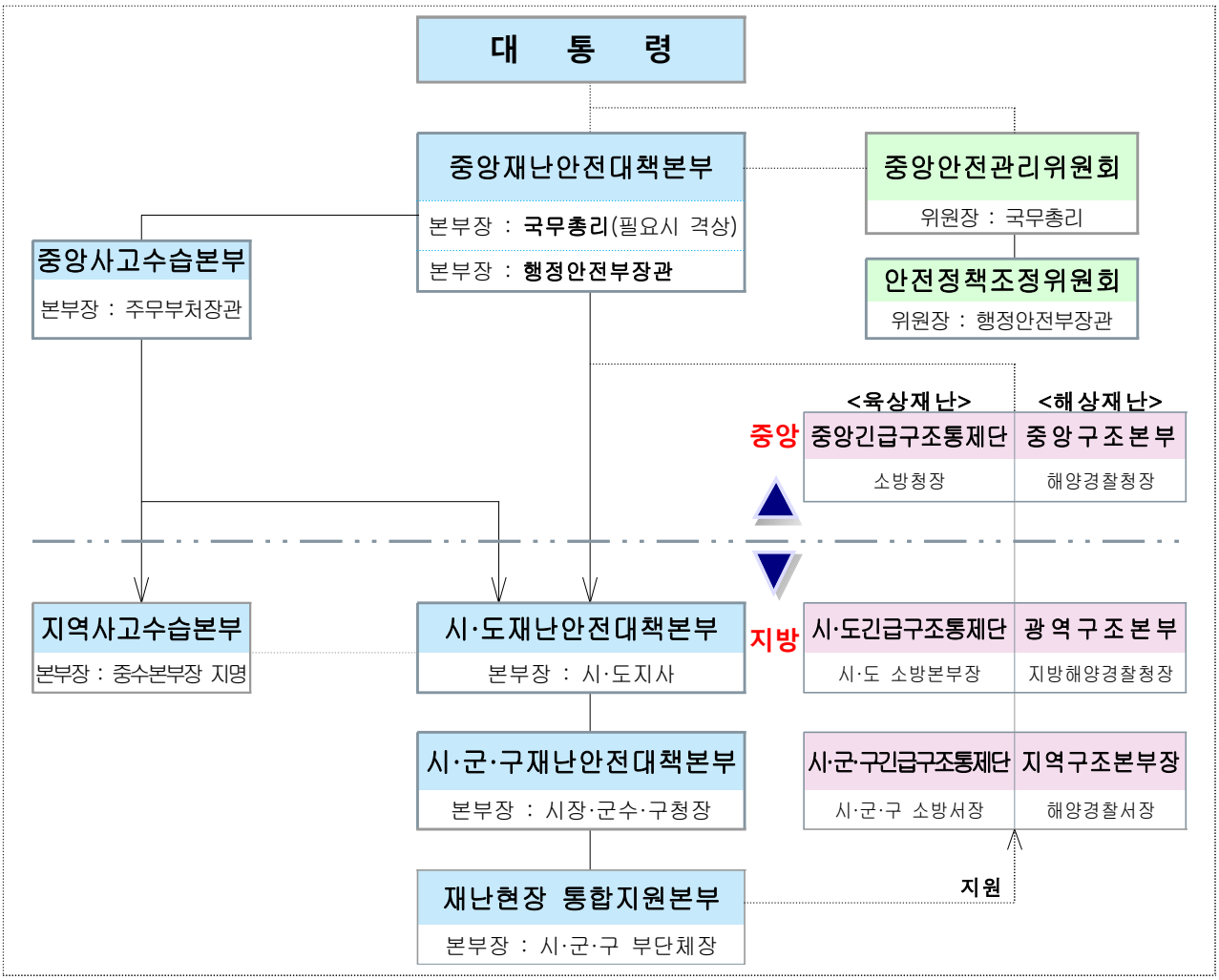
○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업체 기술개발 지원 등

-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24, 2억원)
-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24~'28, 223억원)
  * 산업부 공모사업 신청('24.상), 센터 공사 착공('25.상), 장비구축 완료('28.하)
-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개최('24.4월, 1.5억원) * 원전부품산업 판로지원
- 원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수시, 2회 이상)

Ⅲ 재난 · 안전관리 체계

1. 국가 안전관리 체계

1) 체 계 도



< 수습기구 >	<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 필요시 국무총리로 격상 ▸차 장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기 능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중대본회의 개최 등	▸위원장 : 국무총리 ▸간 사 : 행정안전부장관 ▸기 능 : 재난안전 사업예산 심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관계부처 협의·조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본부장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기 능 :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 및 수습과정 총괄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간 사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기 능 : 중앙위원회 부의안건 검토,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협의·조정

2) 주요 기구별 기능

구 분	기 능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분야별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o 분야별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o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총리)	o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 o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심의 o 중앙행정기관간 재난·안전관리업무 협의·조정 o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건의사항 심의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o 중앙위원회 부의안건 검토,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협의 조정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장관)	o 대규모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o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o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 o 재난 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o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및 필요시 현장 파견 ※ 해외재난시 외교부장관, 방사능재난시 원안위원장, 대규모 재난시 국무총리가 수행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단체장)	o 관할지역내 재난·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총괄, 지휘 o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대응활동 총괄 지휘 o 긴급구조 활동 지휘 및 통제 o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명령 등 주민 보호조치 이행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시·군·구 부단체장)	o 재난 현장에서 재난상황 수습 - 재난현장 상황전파, 출동, 조치, 긴급복구 등
중앙사고 수습본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o 위기징후 목록 작성·운영 o 소관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o 대규모 재난발생시 소관분야 기술제공 등 수습활동 지원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미설치시 재난수습 현황 종합·조정 o 산하기관 등 재난책임기관 활동 종합 및 조정
지역사고 수습본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등)	o 관할지역내 소관분야 재난대비 예방활동 o 자체 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직원 파견 등 지원 o 사고 대응정보 제공 및 수습활동 지원 o 사고 원인조사 및 피해 평가
중앙긴급구조 통제단/본부 (소방/해경청장)	o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지원 -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긴급구조 지원기관간 역할 분담
지역긴급 구조통제단/본부 (지방소방·해경청장, 소방·해경서장)	o 지역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긴급구조 지원기관 지휘·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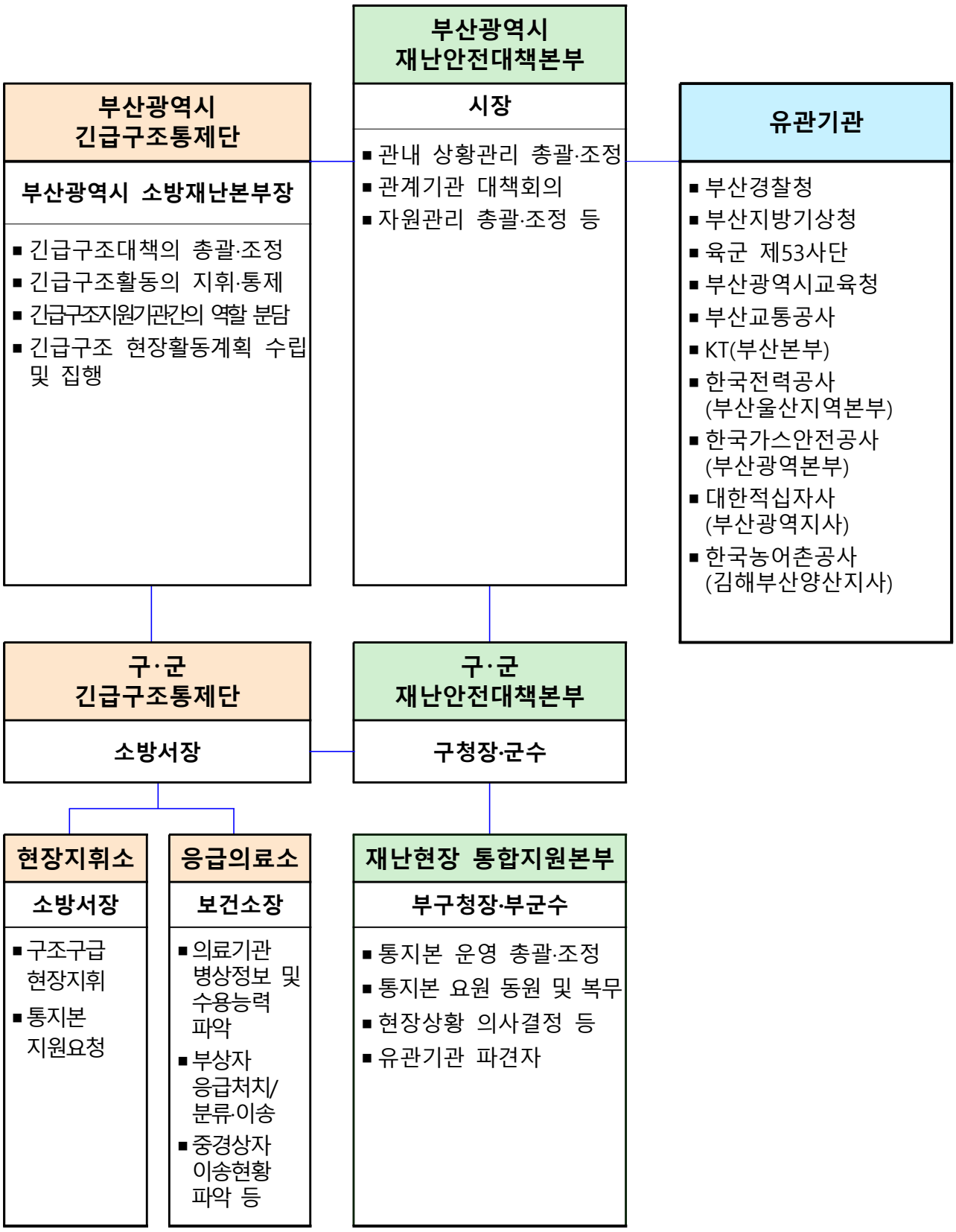
3) 주요 중앙행정기관별 기능

부 처	기 능
방송통신위원회	▪ 재난방송 홍보 지원체계 점검 ▪ 재난상황 대국민 홍보방송, 재난방송 실시 지원
금융위원회	▪ 주관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 주관 : 원자력안전 사고,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방사능 유출에 따른 폐기물처리
기획재정부	▪ 피해에 대한 예산 및 세제지원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교육부	▪ 주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피해시설 응급복구 : 국립·공립·사립 학교시설 등 ▪ 이재민 수용시설(학교 강당, 체육관 등)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우주전파 재난, 정보통신 사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 피해시설 응급복구 : 정보통신시설 등 ▪ 재난발생 피해지역 방송통신시설 긴급 지원
외교부	▪ 주관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재난관리상황 모니터링 ▪ 외국인 사상자 발생현황 등 국내 외국 대사관에 사고상황 통보 ▪ 외국의 구조지원 협조에 대한 정부 대응 통합창구 운영
법무부	▪ 주관 :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 주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지원 요청 상황 접수 및 출동지원 ▪ 전문 재난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구조 활동 간 2차 재난방지를 위한 경계구역 설정·통제
행정안전부	▪ 주관 : 공동구, 위험물 사고, 풍수해지진·화산·낙뢰·가뭄, 정부 중요시설 사고 ▪ 재난상황관리 총괄 ▪ 상황판단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 ▪ 사고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지방세 감면 지원 ▪ 재난안전통신망(LTE,TRS) 재난현장 지원 ▪ 자원 응원 요청 및 조정,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등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방송, 언론활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 가축 질병, 저수지 사고 ▪ 피해시설 응급복구 :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등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원유수급 사고, 원전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 전력 사고,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에너지 긴급 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 재난현장 및 에너지 공급 고립지역 긴급 지원 요청 ▪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 지원 ▪ 이재민 임시 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부 처	주 요 임 무
보건복지부	▪ 주관 : 보건의료 사고, 감염병 재난 ▪ 현장 응급의료소 의료진 및 의료물자 등 확보·지원 ▪ 응급진료 비상체계 운영 및 지원 ▪ 재해지역 방역대책 활동 강화
환경부	▪ 주관 :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식용수 사고, 유해화학 물질 유출 사고, 녹조, 황사, 댐의 사고, 미세먼지 ▪ 먹는 물 공급대책 및 상하수도 시설 응급 복구 ▪ 재해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 하천 및 댐 홍수량 조절·관리(홍수예보발령 등)
고용노동부	▪ 주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국토교통부	▪ 주관 : 공동구 재난, 고속철도 사고, 댐 사고, 도로터널 사고, 광역상수도 사고, 육상화물운송 사고, 지하철·항공기 사고,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피해시설 응급복구 : 하천, 철도,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등 ▪ 교통두절시 응급복구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실시 ▪ 긴급복구물자 운송지원 등 특별수송대책 추진
해양수산부	▪ 주관 : 적조, 조수, 해양 환경오염 사고, 해양 선박 사고 ▪ 피해시설 응급복구 : 어항시설, 어선, 항만시설,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양식시설 등 ▪ 항만하역 및 선박 입·출항 통제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실시
경찰청	▪ 비상연락망 유지, 순찰 및 지원인력 출동태세 점검·정비 ▪ 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 사망자 신원 확인,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 재해지역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소방청	▪ 주관 : 화재 ▪ 인명 구조·구급활동 ▪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문화재청	▪ 주관 : 문화재 시설 사고
산림청	▪ 주관 : 산불, 산사태 ▪ 피해시설 응급복구 : 산사태,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산림작물 등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 ▪ 휴양객 대피, 등산로 통제 및 휴양시설물 순찰강화
질병관리청	▪ 주관 : 감염병 재난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
기상청	▪ 태풍진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전파
해양경찰청	▪ 주관 :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인명 구조·구급활동 ▪ 중앙(지역) 구조본부 운영

2. 부산광역시 안전관리 체계

1) 체 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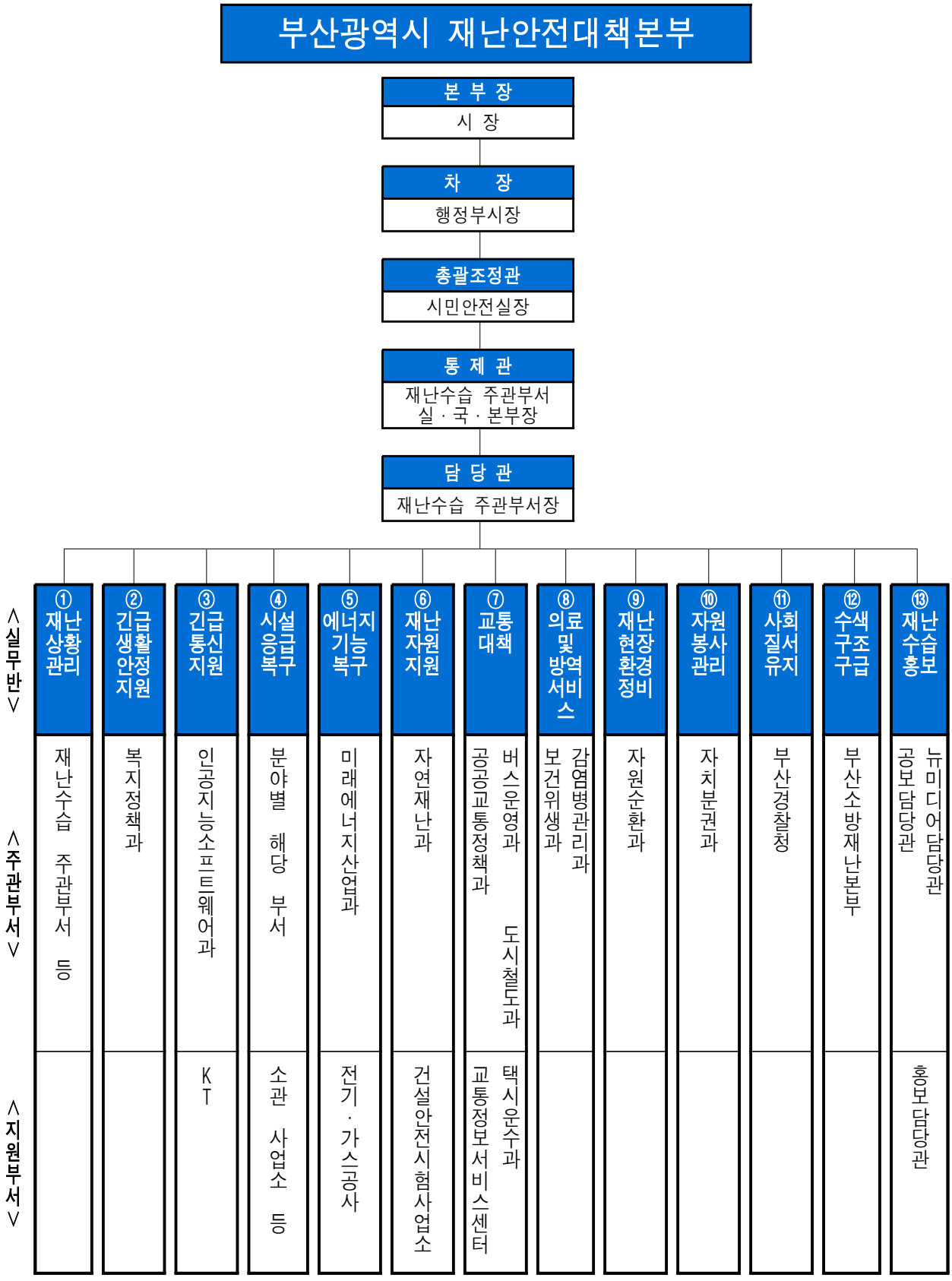


2) 비상기구별 주요 역할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 예·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구청장·군수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 예·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 관내 상황 및 자원관리 총괄·조정, 관계기관 대책회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구·군 부단체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협력
부산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현장지휘소	○ 각급 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의 효과적 현장지휘를 위하여 현장지휘소 설치
응급의료소	○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유관기관	○ 지자체 관할 지역 내 당해 재난과 관계가 있는 기관

3)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구성도



○ 지휘부 주요 임무

구성		주요 임무
지휘부	**본부장** (부산시장)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 총괄
	차장 **(행정부시장)**	• 본부장 보좌(본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총괄조정관 **(시민안전실장)**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대변인	• 재난 수습홍보 총괄
	통제관 *** 재난유형별 소관 실장・국장・본부장**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 *** 재난유형별 소관 담당 부서장**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 실무반 주요 임무

구성		주요 임무
실무반	**1. 재난상황관리**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구성		주요 임무
실무반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3. 긴급 통신 지원	•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관할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시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6. 재난관리자원 지원	•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가동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7. 교통대책	•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구성		주요 임무
실무반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9.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	•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재난지역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수색, 인명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13. 재난 수습 홍보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텔레비전·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배포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 상황단계별 상황근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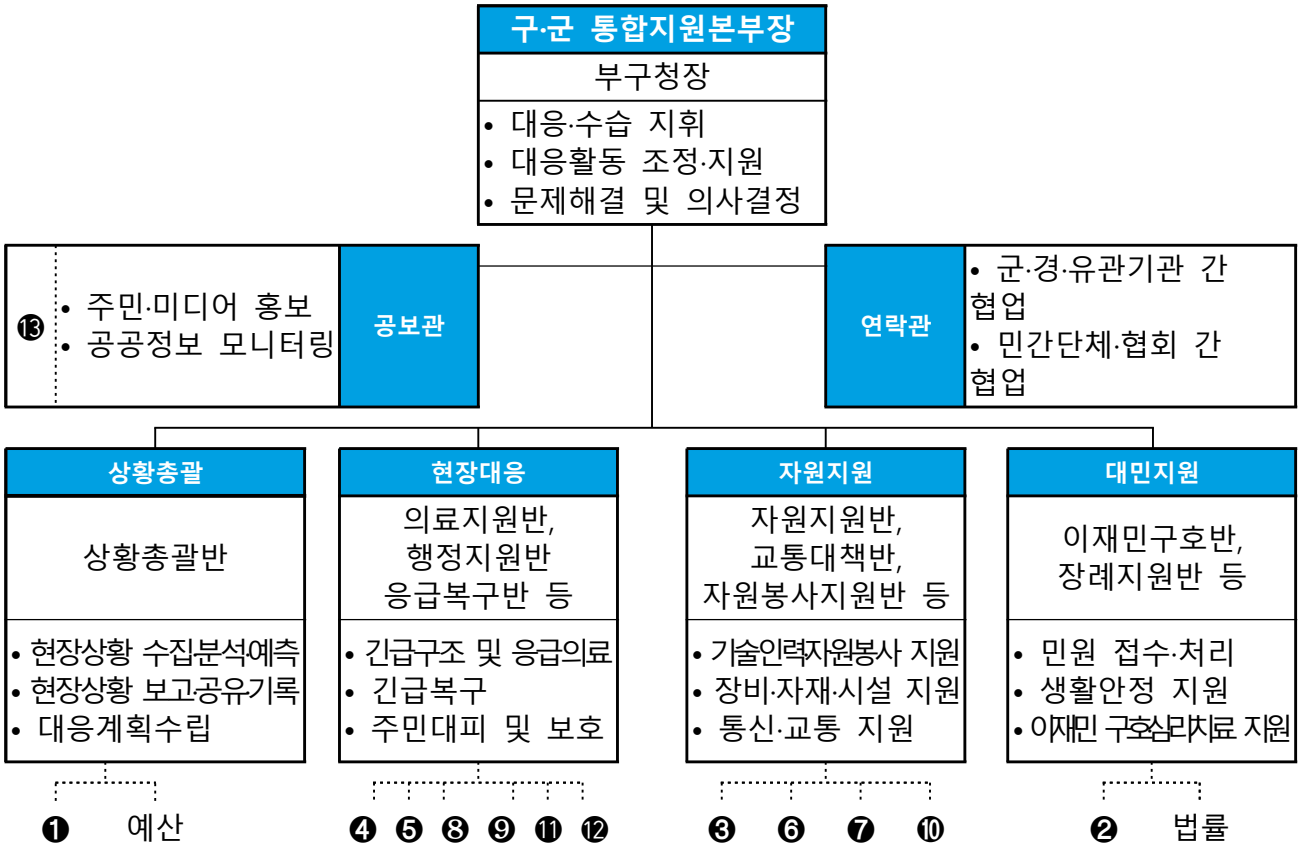
자연재난 상황단계별 비상근무 기준 (2023.11.15. 기준)

구분	비상단계 기준		회의 주재	근무편성	근무 인원	비고
	유형	기상특보				
상시 대비 단계 (관심)	강풍	• 강풍주의보 발표 시	-	• 재난안전상황실 3명	3명	시민안전실
	풍랑	• 풍랑주의보 발표 시(부산앞바다)				
	태풍	• 태풍정보 발표 시				
초기 대응 단계 (주의)	호우	• 호우예비특보 발표 시	자연재난과장	• 자연재난과 1명, 재난안전상황실 3명	4명	
	한파	• 한파주의보 발표 시				
비상 1단계 (경계)	호우	• 호우주의보 발표 시	시민안전실장	• 시민안전실 8명 • 호우 지원부서 10명 - 도로계획과, 수산정책과, 농축산유통과, 하천관리과, 공공하수인프라과, 산림녹지과, 공공교통정책과, 총괄건축과, 복지정책과, 낙동강관리본부	18명	재난안전대책본부
	태풍	• 태풍예비특보 발표 시		• 시민안전실 8명 • 태풍 지원부서 13명 - 도로계획과, 수산정책과, 농축산유통과, 하천관리과, 공공하수인프라과, 산림녹지과, 공공교통정책과, 공공도시디자인과, 총괄건축과, 복지정책과, 낙동강관리본부, 해양레저관광과, 해운항만과	21명	
	강풍	• 강풍경보 발표 시		• 시민안전실 8명 • 강풍 지원부서 6명 - 도로계획과, 수산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녹지과, 공공도시디자인과, 공공교통정책과	14명	
	풍랑	• 풍랑경보 발표 시(부산앞바다)		• 시민안전실 8명 • 풍랑 지원부서 3명 - 해운항만과, 수산정책과, 해양레저관광과	11명	
	대설	• 적설량 1cm 이상 3cm 미만 예보		• 시민안전실 8명 • 대설 지원부서 4명 - 도로계획과, 공공교통정책과, 수산정책과, 농축산유통과	12명	
	한파	• 한파경보 발표 시		• 시민안전실 8명 • 한파 지원부서 10명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도로계획과, 미래에너지산업과, 농축산유통과, 수산정책과, 상수도본부	18명	
비상 2단계 (심각)	호우	• 호우경보 발표 시	시장 (행정부시장)	• 상황관리반(시민안전실) 12명 • 협업기능반(지원부서) 28명 • 유관기관 α명	40명 +α	
	태풍	• 태풍주의보·경보 발표 시		• 상황관리반(시민안전실) 12명 • 협업기능반(지원부서) 28명 • 유관기관 α명 • 전직원 1/10조 β명	40명 +α +β	
	대설	• 적설량 3cm 이상 10cm 미만 예보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				
	한파	• 대규모 피해 발생(예상) 시				
비상 3단계 (심각)	호우 태풍	• 대규모 피해 발생(예상) 시	시장 (행정부시장)	• 상황관리반(시민안전실) 12명 • 협업기능반(지원부서) 28명 • 유관기관 α명 • 전직원 [호우] 1/10조, [태풍] 2/10조, [대설] 2/10 β명	40명 +α +β	
	대설	• 적설량 10cm 이상 예보 ※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량이 20cm 이상 예상				

1. 기상특보 발표 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근무 즉시 돌입(비상단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
※ 주말, 공휴일 및 일과 이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비상근무반에 즉시 통보
2.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재난발생 여건 등 고려, 비상단계 및 근무편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대설 비상근무는 '기상청 정기 예보통보문' 적설량을 기준으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결정
4.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

4) 부산시 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체계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❶ 재난상황관리	❷ 긴급 생활안정 지원	❸ 긴급 통신 지원	❹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❺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❻ 재난관리자원 지원	❼ 교통대책	❽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❾ 재난현장 환경 정비	❿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⓫ 사회질서 유지	⓬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	⓭재난 수습 홍보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통합지원본부 주요임무

구분	실무반	주요 임무	소관 부서장	지대본 연계
지휘부	본부장	• 통합지원본부 운영 총괄・조정 • 통합지원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부단체장	❶ 재난상황 관리
	공보관	• 주민・미디어 홍보(SNS 활용)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지상파 방송, 지역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 언론브리핑 • 취재지원	공보관련 부서장	
	연락관	• 각 기관 대표자들의 의견 조율 • 통합지원본부장의 연락창구 역할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 및 협회, 전문가 간 협업	행정지원 부서장	
상황총괄	상황총괄반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외국인 사상자 등) • 현장대응계획수립 • 현장상황관리관 및 전문대응팀 파견 • 예산 확보 및 집행 • 현장보고서 작성 •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브리핑 •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현장상황수집·보고(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반 등)·전파 •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 예산 확보 및 집행	재난총괄 부서장	❶ 재난상황 관리
	피해조사반	• 피해현황 조사 및 기록		
	전문자문반	• 현장상황 분석 및 예측 자문 • 현장대응계획수립 자문	민간전문가	
현장대응	응급복구반	• 공공·사유시설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 복구추진 소요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및 협의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❹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지원반	•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 구조·구급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지원	에너지관련 부서장	❺ 에너지 기능복구